

“5년 동안 딱 1건이라니”...형식에 그친 몰카 단속

광주 불법촬영 범죄는 매년 증가
경찰·지자체 헛물 단속 실적 미비
고정 카메라·화장실 등 범위 한정
“실효성 있는 예방대책 마련해야”

광주지역에서 불법촬영 범죄가 매년 가승을 부리고 있지만, 단속 실적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몰카범죄 수법이 갈수록 다양화·교묘해지고 있지만, 경찰과 관할 자치구는 주로 화장실과 공공장소 등을 중심으로 형식적인 단속에만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지역에서 몰카 범죄 상당수는 신고에 의해 적발되고 있어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광주시와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5월 기준) 광주지역에서 발생한 불법 촬영 범죄는 557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8년 115건, 2019년 120건, 2020년 116건, 2021년 157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올해(1~5월)는 49건의 불법 촬영 범죄가 발생했다. 이처럼 지역에서 몰카 범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단속하고 적발해야 할 경찰과 지자체의 몰카 단속 실적은 전무한 실정이다.

앞서 시는 지난 2017년부터 국비 3억원을 투입 전파 탐지기 134대와 렌즈 탐지기 134대 등 불법카메라 탐지장비를 도입했다. 이후 광주경찰청과 각 자치구, 행정복지센터에 배포했고, 광주청은 지난해 적외선 탐지기 5대와 무선 인터넷프로토콜(IP)카메라를 5개 등 최신 장비를 추가로 구매했다. 첨단 장비를 동원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5월까지 화장실, 모텔, 공연 등 1만 1,943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지만, 발견한 몰카 카메라는 고작 1대뿐이다. 그동안 지역에서 발생한 몰카 범죄 장소는 대학병원 여성 탈의실, 노상, 상점 등에서 발생했으나, 경찰 등은 범죄발생이 전무한 장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한 것이다.

단속이 고정형 설치 카메라 찾기에만 초점이 맞춰지고 화장실과 폐쇄된 공공장소 위주로만 진행됐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불법촬영 범죄가 고정형 설치 방식보다 무음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휴대용 전자기기와 볼펜, 안경 등을 개조한 초소형 카메라에서도 손쉽게 이뤄지고 있어 단속 방향을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20일 목포 한 중학교에서는 30대 남성이 관사에서 동료 여교사가 샤워하는 장면을 본인의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시민 양 모씨(37·여)는 “범죄 수법이 갈수록 다양화 되고 있는데도 단속은 화장실이나 일정한 범위에만 한정돼,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서 “지자체에서도 변화하는 범죄 수법에 대비해 단속에 대한 방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선 현재 한정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사전에 몰카 범죄를 예방 할 수 있는 제도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이와 관련, 최선우 광주대학교 경찰행정학 교수는 “이동형 카메라가 발달된 상황에서 고정 카메라만 찾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면서 “남녀 통행이 자유로운 곳 등 범죄 현상이 주로 어디서 발생 했는지 확인하고 범위를 정해야 한다. 그리고 초소형 카메라에 대한 제품 구매 시 규제와 징벌적 손해배상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찬기 기자



장마철 대비하는 선별진료소
장마를 앞둔 13일 오후 광주시 북구 상시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들이 장마철 폭우, 강풍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설물에 설치된 모래주머니를 확인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여수 어선간 충돌로 전복...선원 7명 전원 구조

여수시 연도 인근 해상에서 어선 2척이 충돌해 1척이 전복됐으나 바다에 빠진 선원 7명 모두 무사 구조됐다. 13일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5

시 58분께 여수시 남면 연도 남동쪽 약 17km 해상에서 4톤급 새우조망 어선 A호가 30톤급 근해장어통발 어선 B호와 충돌한 뒤 전복됐다. 이 사고로 A호 승선원 7명이 바다에 빠졌으

나, 곧바로 B호 선원들에 의해 모두 구조됐다. 구조된 선원 3명은 가벼운 찰과상만 입었다. 사고 직후 두 어선 선장은 음주 운항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양방 작업 도중, 어선 B호가 선체 중앙을 들이받았다’는 A호 선장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여수=곽재영 기자

조유나양 일가족 1시간 머물다 바다 돌진

경찰, 블랙박스 영상 복원
부검서 수면제 성분 검출

조유나 양(10) 일가족 사망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복원된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조양 가족이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대화를 나눈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또 일가족 체내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된 것을 토대로 우울증에 의한 극단적 선택에 무게를 두고 조만간 수사를 종결 지을 예정이다. 13일 광주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조양 가족이 타고 있던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와 블랙박스 등을 복원했다.

블랙박스 영상 분석 결과, 조씨 부부는 완도 송곡항 주변 방파제에서 1시간 동안 서너 마디 대화를 나눈 뒤 30km의 속도로 바닷속으로 돌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만조 때 차량에 물이 차기 시작하면서 부부가 수면제를 복용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해당 영상에서 조양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아 생사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다. 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경찰에 ‘조양과 부모 등 총 3명의 체내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다’는 부검 결과를 구두로 통보했다. 다만 수면제는 치사량은 아니었으며, 수면제의 종류, 복용 시간 등 구체적인 결과는 추가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찬기 기자

농업보조금 편취·공무원 협박 기자들 징역형

매매 서류를 위조해 농업 폐업지원금을 가로채거나 공무원들을 협박한 지역신문 기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공무원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공무원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B씨(50)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C씨(65)는 징역 8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19년 6~10월 엽소 2,560마리를 전부 처분한 것처럼 위조한 매매확인서를 곡성군에 제출해 자유무역협정(FTA) 폐업지원

금 4억 7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3월 곡성군의 창업지원금 사업에서 탈락하자 군청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C씨는 지난해 3월 군청에 찾아가 택자를 내리치면서 감사를 청구하거나 악의적인 기사를 쓸 것처럼 공무원들을 협박한 혐의다. 재판부는 “A씨는 보조금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 금액도 환수되지 않았다”며 “B, C씨도 신분을 악용했고 연동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최환준 기자



미소가 행복이 되어 돌아오는 곳

존재만으로도 얼굴 가득 미소가 번지는,
그 미소가 행복이 되어 되돌아오는 곳 **미소래**의 이상향입니다

여수 올곧은 **국제 미소래**

1차 | 59㎡ 258세대
2차 | 84㎡ 138세대
총 396세대

임대 문의 **1577-7566**

시공 **국재위너스(주)** | **국재 미소래**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본 홍보물에 사용된 이미지는 임주자의 이미지이기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임차문의 및 상담 부탁드립니다.